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전개와
계약학과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한 지 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전개와
계약학과의 역할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한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한 지 혜

한지혜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이 글은 평생학습중심대학이 제도화 되는 과정에 있어서 계약학과 제도의 기대역할에 대한 연구이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기존의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체제를 성인학습자 친화적 체제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평생학습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2008년 9월, 8억 예산, 7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계약학과는 산업체 및 국가와 대학이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대학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써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개의 사례대학(국립대학 1곳, 사립대학 2곳, 전문대학 1곳)의 사업 참여 동기, 운영전략 분석 하였고,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대학의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평생학습중심대학 참여 사례대학들은 지역적 여건과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참여동기를 가지고 운영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본부중심의 체제개편 지원과 대학-지역사회-산업체 연계, 그리고 성인학습자 친화적 환경조성이 대학체제개편의 주요 전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생학습중심대학이 아직 제도화 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지원이라는 지지대를 제거하더라도 체제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전략 중 하나이자 200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오고 있는 성인학습자 계속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인 계약학과가 평생학습중심대학 내 제도적 요소로서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연구 결과,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체 또는 지자체의 교육수요에 따른 대학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정부, 대학, 산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주체들 간의 재정지원과 책무성에 있어서도 관련 법률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분담과 교육운영에 있어서의 책무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용에 대한 면세제도나 우선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금 환급제도 등 교육소외를 경험할 수 있는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계약학과는 대학에 설치되어 대학의 학칙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대학체제는 생태계가 될 수도 있고 한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본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대학 전체가 성인 친화적이고 유연한 학사체제를 추구하는 바,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서 일반 학령기 중심 대학과 차별화된 생태계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이러한 전략적 조합이 충분히 지속될 경우, 평생학습중심대학 제도화에 있어서 계약학과의 제도적 요소가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의미는 첫째,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전개에 대한 거의 유일한 사례연구라는 점, 둘째,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제도화를 위한 협력기제로서 계약학과의 역할을 고찰했다는 점에 있다.

주요어: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계약학과,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직업교육, 계속교육

학번: 2012-21350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6
3. 연구 방법	7
4. 분석의 틀	12
5. 연구의 제한점	13
II. 이론적 배경	14
1. 평생학습사회와 고등교육	14
2. 비전통적 고등교육 형태로서 평생학습중심대학	20
3. 계약학과	26
III. 평생학습중심대학 사례분석	32
1.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참여 동기	33
2. 평생학습중심대학 운영 전략	36
3.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특징	47
4.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개선해야 할 점	49
IV. 평생학습중심대학에서 계약학과의 역할	51
1. 계약학과의 제도적 요소	51
2. 계약학과와 대학의 역할	54
3. 평생학습중심대학 내 계약학과의 역할	58
V. 논의	63
VI. 요약 및 결론	67
참고문헌	71
부록	75
Abstract	79

표 목 차

[표I-1] 평생학습중심대학 사례조사 대상	10
[표II-1] 2012년 2013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비교	23
[표II-2] 계약학과 주요 내용	28
[표II-3]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요 내용	29
[표III-1] 사례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전략 특징 요약	48
[표III-2] 2014학년도 평가 지표 및 배정	49
[표III-3] 2012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정규학과 개설현황	60
[표III-4] 2013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정규학과 개설현황	60

그 림 목 차

[그림I-1] 연구흐름도	7
[그림I-2] 분석의 틀	1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불안한 사회이다. 1997년 IMF 사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고용 안정성의 상실 그리고 최근 믿기 어려운 안전사고들까지, 사람들은 불안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는 데 있다.

지식경제와 세계화,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포화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평생학습은 더 이상 여유로운 삶을 기반으로 한 유토피아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과정 속에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사회 담론은 자연스럽게 유연화 된 노동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기제로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세계적으로 평생학습 관련 제도와 정책의 구성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노동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고등교육체제는 지식 기반사회 내 첨단지식생산과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의해 기존의 상아탑으로서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개선하고 성인학습자들의 계속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고등교육개혁의 화두는 평생학습이며, 이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은 90년대 초반 이미 대학 내 25세 이상 성인학습자의 비율이 43% 이상으로서 대학이 직장에서 회기 하는 사람들의 재교육 장소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같은 해 일본에서 대학설치기준을 개편하여 일반 사회인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은

1997년 ‘학습사회에서의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in the Learning Society)’이라는 고등교육개혁 보고서를 발표하여 학습사회에서 고등교육은 국민 모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NCIHE, 1997).

한국사회는 1997년은 IMF 사태라고도 불리는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급격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정성의 감소가 사회전반에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생학습은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대안적 사회안전망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초기 평생교육 담론이었던 UNESCO의 인문주의적, 민중계몽적 평생학습에서 OECD의 경제발전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으로 급속하게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교육체제는 여전히 부실했고, 고용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계속교육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성인학습자의 몫이었다고 할 수 있다(한승희, 2010). 그러나 평생학습, 계속학습에 대한 책임을 성인학습자들에게 감당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학계와 사회의 문제제기가 심화되면서 성인학습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체제 구축에 대한 요구가 점차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고등교육 팽창으로 인해 양산된 대학들에 대한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출산을 저하로 인한 대학입학자원 감소 문제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대학입학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안을 발표하였고, 이 계획이 정원 감축과 정부재정지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만큼 대학들의 위기의식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입학자원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이미 경쟁력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사립대학의 경우 새로운 자원 확보를 위한 외적 압박과 내적 개혁의 움직임이 모두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발표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세부방안에서는 2023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을 16만 명 줄이는 것을 목표로 4년제와 전문대,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 모든 유형의 대학에 대해 감축인원을 할당하는 ‘쿼터제 감축’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한국 고등교육체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입학자원감소와 대학구조개혁이라는 외적 압력 속에서 학령기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던 전통적 대학체제가 성인학습자라는 새로운 입학자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철저한 학령기 학생 중심체제로서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의 경계 역할을 확실히 해 오고 있었던 만큼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천세영·한승희, 2006). 그러나 지식경제의 도래와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해 대학이 평생학습이라는 가치를 차용하기 시작한 것은 설령 그 동기가 대학의 생존이었다고 치더라도 형식교육의 종점모형 붕괴의 계기가 된 것만은 확실하다.

대학이 평생학습을 점진적으로 체제화 하는 모습은 일찍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대학들이 비학위 과정 개설을 통해 성인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2013년 기준 270개 일반대학 중 259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대학과 기능대학에 설치된 평생교육원까지 합치면 433개 고등교육기관 중 405개 기관이 평생교육원을 운영 중이다.

이처럼 부설 평생교육원이 이름처럼 대학의 중심 보다는 언저리에서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요구를 수용하였다면, 2008년부터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중점 과제로 시행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대학을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와 성인학습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대학체제 전체를 개편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시작된 2008년은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

정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하면서 한국사회 내 평생학습 및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와 위상이 전기를 맞이하게 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책 관계자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진된 상태였고, 출산율 급감에 따른 대학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해 2008년 7개 대학, 8억 규모로 시작했던 본 사업은 2013년 새로운 정권 출범에도 추경예산을 더욱 늘려 47개 대학, 275억 규모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규모의 성장과 사업구조의 개선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중심대학은 일종의 실험적 사업으로서 정부의 정책변화 및 예산의 편성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중심대학이 한차례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고등교육체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유관 제도나 법령과의 점진적인 연계와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구조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과 노동시장 연계를 위해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된 '계약학과 제도'는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의 직업능력개발교육을 대학과 산업체 또는 정부가 계약을 통해 대학의 학위 또는 비학위과정으로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계약학과는 법률 상 계약 당사자들의 책임, 운영방식, 산업체와 학습자, 그리고 정부 간 교육운영 비용분담, 고등교육법에 의한 행정제재, 유관 법률을 통한 정부의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고, 산업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의 특성을 모두 가진 제도라는 점에서 본 연구가 특별히 주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계약학과 제도라는 두 기제가 전략적으로 조합할 경우, 어떠한 상보적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개 대학(국립대학 1곳, 사립대학 2곳, 전문대학 1곳)의 사례를 분석하여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기존의 대학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이러한 대학환경을 기반으로 평생학습중심대학 내 계약학과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첫째,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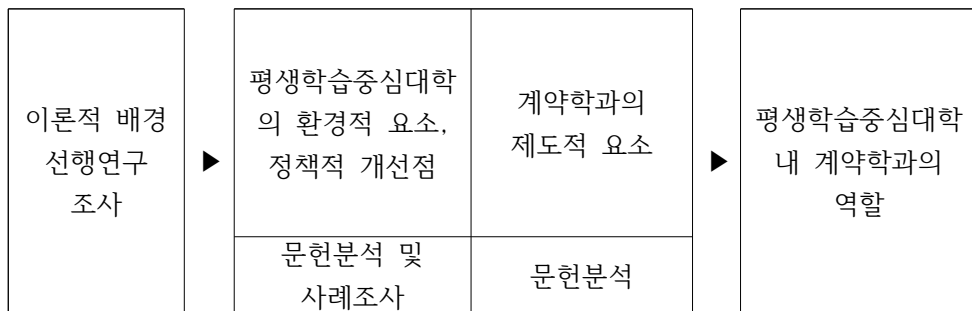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의의나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이 또한 참여대학의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정량적 지표를 사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참여 대학이 실제로 어떠한 동기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체제개편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참여대학들의 참여 동기와 체제개편 전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4개 사례대학(국립대학 1곳, 사립대학 2곳, 전문대학 1곳)의 사업 담당자들의 대담회를 통해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평생학습중심대학 운영에 있어서 계약학과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기존의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체제를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는 점에서 대학기반 성인학습자의 계속직업능력교육을 지원하는 계약학과 제도와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운영에 있어서 계약학과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계약학과 관련 법령, 시행령, 운영규칙,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이러한 제도적 요소들이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인 연구방법과 문헌연구방법이 함께 사용되었다.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계약학과의 개념, 목적, 요소,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전개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4개 참여대학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계약학과의 제도적 요소를 분석하여 평생학습중심대학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림I-1] 연구흐름도

특히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참여동기와 운영전략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평생학습중심대학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국립대학 1곳, 사립대학 2곳, 전문대학 1곳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각 대학의 참여 동기와 전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신 제도주의와 자원-의존 이론의 통합적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이 통합적 관점에 의하면 대학은 조직(organization)의 한 유형으로서 환경적 변화를 수용하거나 저항하는 적극적인 존재이며(Meyer, 1994) 동시에 생존을 위해 자원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며 활동하는 존재이기도 하다(Pfeffer 1982). Gornitzka(1999)에 의하면,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두 가

지 요소를 전제로 한다. (1) 외부적 압력은 조직에 영향을 미치며, (2) 조직은 생존하기 위해 변화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참여대학의 행위는 평생학습사회라는 외부적 변화에 대한 반응이며, 다른 조직들과 상호작용 또는 협상을 통해 생존을 위한 자원을 획득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식경제를 기반으로 한 평생학습사회의 맥락에서 대학의 전통적 운영방식과 자원획득방식은 변화의 압력 아래 있으며, 출산을 감소로 인한 대학입학자원의 감소는 학령기 학생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전통적 대학의 자원 확보 방식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전개과정 사례 조사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네 개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참여대학들이 각 대학의 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비공식적인 간담회에 참여하여 실제 운영에 대한 사례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대학은 지역국립대학 A, 지역사립대학 B, 지역사립대학 C, 지역전문대학 D로 익명 처리하였으며 대학 사례를 공유한 사람은 각 대학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담당자 또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단장으로서 대학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전략과 특성에 있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대학 A: 지역국립대학

A 대학의 경우 충청권 4년제 지역 국립 거점대학으로서 권역별 특성화 캠퍼스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 내 입지가 높은 편이다. 4년제 국립대학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선두적으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하였다. 국립대학으로서 대학의 명성이나 지역적 입지가 어느 정

도 보장되는 만큼 새로운 입학자원 확보나 재원조달의 목적보다도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한 책무성을 실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학습자들이 일과 대학생활을 병행하며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2030 선취업 후진학 트랙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재교육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체제개편 및 성인친화적 학과, 계약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A 대학의 경우 아직까지는 평생교육원 소속의 사업팀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지만 추후 평생교육 단과대학 체제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관리할 계획이다.

사례대학 B: 지역사립대학

B 대학의 경우 경기권 4년제 사립대학으로서 2013년에 평생학습중심 대학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수도권에 가까운 입지조건과 지자체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통해 활동적으로 성인 친화적 체제개편을 추진해 가고 있는 사례이다. 특히 지역에서 대표적인 평생학습전문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B 대학은 주민들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지역 봉사 성격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체제개편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 여러 종류의 정부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B 대학에서는 총장 직속 평생교육대학에서 두개의 성인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학위과정으로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사례대학 C: 지역사립대학

C 대학은 대구 경북권 4년제 사립대학으로서 2013년에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사업계획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등 본부를 중심으로 체제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례이다. 지역에 전

통 마을 및 향토 관광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학령기 입학자원감소에 대비하여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역 인구분포를 감안하여 4050 세대를 위한 5개의 성인별도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학위과정으로 지역관광 및 향토 산업과 연계한 특화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개발 및 지역인재양성을 목표로 평생교육뿐 아니라 지역자원에 대한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례대학 D: 지역전문대학

D 대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여 있는 경남지역에 위치한 전문대학으로서 지역 내 산업체의 인력 양성 수요가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D 대학 지역 평생교육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산업체 요구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2013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 참여를 통해 본격적으로 평생교육을 대학의 중심 전략으로 채택한 사례이다. D 대학에서는 산업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고용예약을 기반으로 산업체 요구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학사체제 개편이나 전공과목 개폐가 가능할 정도로 유연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고강도의 교수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I-1] 평생학습중심대학 사례조사 대상

	A 대학	B 대학	C 대학	D 대학
지역권역	충청권	경기권	대구경북권	대구경북권
대학유형	국립거점대학	사립대학	사립대학	전문대학
대학여건	높은 인지도, 권역별 특성화	지자체와 긴밀한 연계 유지	지역 내 유일한 4년제 대학	지역산업단지 와 긴밀한 연계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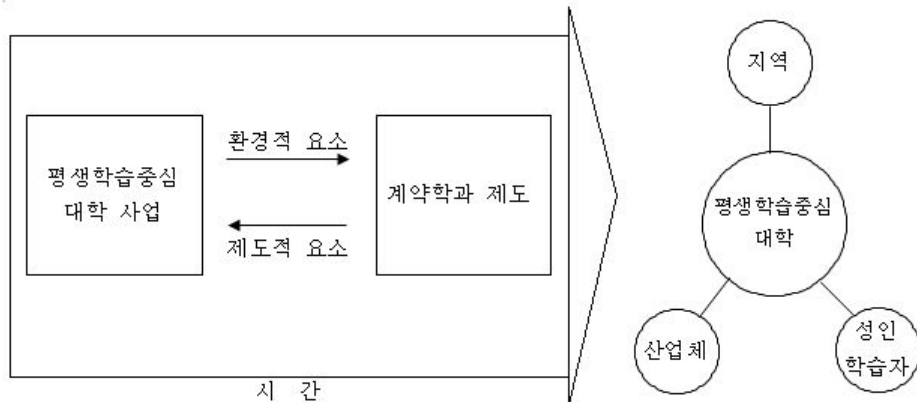
	캠퍼스 보유			구축
사업실행구조	평생교육대학 내 성인학과, 시간제등록제, 계약학과 운영	평생교육대학 내 성인학과 운영	단과대학 아래 성인학부 및 성인학과 운영	단과대학 아래 산업체 위탁반, 계약학과 및 성인별도반 운영
주요대상	2030 세대	4050 세대	4050 세대	4050 세대
중점추진전략	선취업 후진학 잠재수요에 대한 프로그램 개설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성인학습자 친화적 커리큘럼 공급 및 지역 리더로 양성	지역향토산업 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 산단 산업체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 고용예약
사례발표자	평생학습중심 대학 사업 담당자	평생학습중심 대학 사업단장	평생학습중심 대학 사업단장	평생학습중심 대학 사업 담당자

나. 평생학습중심대학 내 계약학과의 역할

평생학습중심대학 전략으로서 계약학과의 가능성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자료, 통계자료, 교육부 및 직업능력개발원의 계약학과 관련 연구자료 등의 문헌분석 및 직업능력개발원 내 계약학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계약학과 운영 실태에 대한 조연을 구하였다.

4. 분석의 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I-2] 분석의 틀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계약학과 제도를 상호작용하는 두 활동으로 보고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산출요소를 대학 체제개편이라는 환경적 요소, 그리고 계약학과 제도의 산출요소를 법령 및 유관 법령에서 보장하는 제도적 요소로 보고 그 두 요소간의 상호보완작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새로운 대학체제의 제도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2장에서는 다룬 평생학습중심대학의 특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현재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대학 기반 성인학습자 계속교육제도인 계약학과에 어떠한 환경적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4장에서는 계약학과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서 관련 있는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평생학습중심대학이 추구하는 체제개편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요소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두 활동이 어떠한 상보적 관계 안에서 평생학습중심대학을 지속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할모델을 산출하고자 한다.

5.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개인연구자의 입장에서 대학의 내부문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심층적인 사례에 대한 사용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사례대학의 이름은 가명처리 되었으며, 대학의 사적인 정보가 드러나는 정보는 삭제되었다. 이와 같은 평생학습중심대학 운영정보에 대한 접근의 한계는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중심대학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게 되며, 이는 결국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담론 형성을 어렵게 한다. 때문에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성과 또한 대학정보공시의 한 항목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성과를 일반 학령기 중심대학과 차별화하여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후속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계약학과에 역할에 관한 부분에서 본 연구가 택한 방법은 제도 분석이었지만, 실제로 이 제도들이 평생학습중심대학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가정이 증명될 필요가 있다. 2013년 기준 전국의 계약학과 451개 중 7%에 해당하는 34개 학과가 평생학습중심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4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한 유형인 성인계속교육형 대학에서는 성인학과 또는 계약학과 설치 현황이 중요한 성과 지표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 두 기제간의 실제적인 관계에 대한 사례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평생학습사회와 고등교육

이 절에서는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통하여 평생학습사회의 도래 및 그 사회구조적 양상에 적합한 고등교육체제에 관한 개념과 조건을 탐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고등교육체제의 변화과정을 통해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환경적 맥락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사회

평생학습 또는 평생교육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며, 아직까지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개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부터 유럽에서는 실천된 다양한 방식의 ‘성인교육’은 평생교육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는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유형의 학교 밖 교육들을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직업교육은 성인교육과 별도로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으로 불렸으며, 영어권에서는 주로 직업 현장에서 필요한 단기간의 보충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과 동일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한승희, 2010). 계속교육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영국에서는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이후의 교육 가운데 대학 등의 형식적 고등교육(formal higher education)을 제외한 비 학위 고등교육 부문을 추가교육(further education)이라고 불러 왔으며, 1944년 영국의 교육법에서 처음으로 법제화 되었다. 추가교육은 (1) 의무교육을 마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일제 또는 시간제의 교육, (2) 여가시간을 이용한 모든 조직적인 문화적, 창조적 활동, (3) 모든 국민은 희망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4) 국가 및 지방교육당국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교육으로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소년에 대한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학교 외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한승희, 2005a).

계속교육 논의를 '전 생애에 걸친 교육'으로 확장하게 된 것은 1972년 UNESCO의 제3차 세계성인교육대회에서 포르(Edgar Faure)가 주도해 펴낸 보고서 "Learning to be"가 발표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한승희, 2010). 이 보고서에서 평생교육은 '교육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조직들이 형성되는 원리'로서 제시되었고, 이는 교육의 지평을 학교사회에서 학습사회로 넓힌 선구적인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UNESCO의 평생교육운동에 뒤이어 1973년 OECD는 "순환교육: 평생 학습을 위한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은 (1) 기존의 경직된 학교 교육 체제를 회기 가능한 형태로 유연화 시키고, (2) 체제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하여 정규트랙을 벗어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며, (3) 교과중심의 학교교육을 능력중심(competency-based)의 평생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학교교육 후 또는 학교교육 밖 비형식 교육에 한정된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개념과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OECD가 주창한 '정규교육 시스템의 유연화'로서 순환교육의 개념은 1996년 발표된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for All)> 문건을 통해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은 OECD에 의해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고용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기체로서 제안되었고, 해당 기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서 학습사회(learning society)가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이때 학습사회는 허친스, 랑그랑, 포르 등이 주장했던 인문주의적 학습사회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한승희, 2010), 90년대 말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경제위기를 경험한 여러 사회들에게 급속히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 UNESCO에 의해 교육제도의 조직 원리로서 제시되었던 평생교육 개념은 90년대 중반 이후 OECD의 평생학습 담론과 맞물려 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시스템으로 제안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90년대 말 정보화와 세계화를 경험하고 있던 유럽사회에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으로서 평생학습 논의가 폭넓은 공감을 얻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최상덕 외, 2009). 이러한 맥락에서 EU는 평생학습을 “개인의 시민적, 사회적, 고용관련 관점에서 지식, 기술(skill), 역량(competence)의 향상을 목적으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 활동”으로서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을 망라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김중서 외, 2009).

평생학습사회를 정의하는 것은 평생학습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학습사회에 대한 담론의 중심은 허친스, 랑그랑, 포르 등이 주창한 인문주의적 학습사회에서 OECD에 의해 90년대 말 제안된 유연한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체제로서 학습사회로 옮겨져 갔다. 이처럼 학습사회라는 개념이 다양한 가치를 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사회란 학령기 형식교육 지원 중심의 학교사회를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모든 생애단계에 있는 구성원들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지원받는 체제가 정착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김중서 외, 2009).

학습사회에 대한 논의가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정보화와 세계화를 필두로 등장한 지식경제(knowledge based economy)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식경제체제 평생학습은 지식의 신속한 축

적과 생산 기제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Lundvall and Archibugi(2001)는 지식의 폐기와 창조가 경쟁력이 되는 학습경제 (learning economy)라는 개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승희(2010)는 학습 경제를 학습사회의 한 가지 존재방식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는 노동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등 후 고등교육체제 (post-secondary & higher education)에 대한 새 판 짜기가 강력하게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나. 평생학습사회와 고등교육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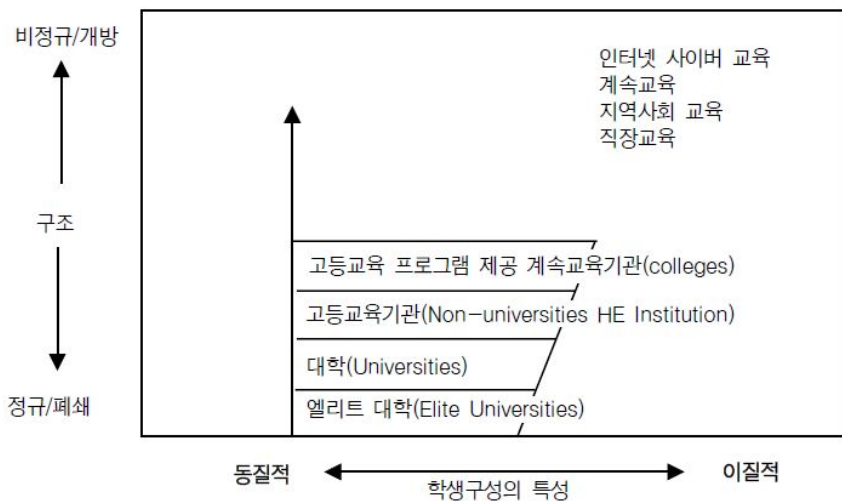
현재 세계적인 고등교육개혁의 화두는 평생학습이며, 이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은 90년대 초반 이미 대학 내 25세 이상 성인학습자의 비율이 43% 이상으로서 대학이 직장에서 회기 하는 사람들의 재교육 장소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같은 해 일본에서 대학설치기준을 개편하여 일반 사회인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지한 것과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은 1997년 ‘학습사회에서의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in the Learning Society)’이라는 고등교육개혁 보고서를 발표하여 학습사회에서 고등교육은 국민 모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NCIHE, 1997). ‘디어링 보고서’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정책문서에서는 학습사회에 적합한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의 비전과 역할, 개혁정책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디어링 보고서는 고등교육비전의 핵심을 “학습사회로의 발전”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NCIHE, 1997)에서 평생학습사회 담론에 있어서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서 정의한 학습사회는 직업생활 이전, 과정, 이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평생학습의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체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Schuetze & Slowey(2002)의 모형에 따르면 학습사회에서 고등교육의 구조는 형식교육기관만이 아닌 비형식 고등교육기관까지 확대되며, 학생구성 또한 학령기 학생 뿐 아니라 성인학습자와 같은 비전통적 학생들의 진입으로 인해 다양해지는 모습을 예측하게 해 준다.

아래 그림에서 뒤집어진 피라미드는 일반적인 권위 의식에 따른 위계 구조를 역순으로 보여주고 있으며(Schuetze & Slowey, 2002), 대학(University)는 형식 고등교육의 한 유형으로서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구성에 있어서는 동질적이고, 구조상 폐쇄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을 위한 고등교육은 학생 구성에 있어서는 비전통적 학생들을 포괄하고 그 구조에 있어서는 진입과 회기가 유연한 형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학습사회에서의 고등교육은 학생 구성의 특징에 있어서는 이질적으로, 구조에 있어서는 비정규/개방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I-1] 평생학습을 위한 고등교육의 변화 *출처: 최상덕 외(2009)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고등교육의 의미와 대학의 위상전환에 대해 고민한 천세영과 한승희의 연구에서는 대학이 평생학습사회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학의 의미와 지평을 과감히 넓히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곧 ‘탈대학’ 과정이라고도 지칭할 수 있다(천세영·한승희, 2009). 여기에서 ‘탈대학’ 과정이란 (1) 대학의 의미와 지평을 과감히 넓히는 작업이며, (2)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평생학습 활동들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이고, (3)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는 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다(천세영·한승희, 2009).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형 평생학습 중심 고등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되었던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대학의 역할을 학령기 학생에 대한 고등교육 공급에서 전 생애에 위치한 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탈대학’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형식교육의 종점모형으로서 군림하던 대학을 평생학습을 위한 ‘비전통적 고등교육’의 한 유형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 사업체와의 연계(network)를 통해 지역 평생학습수요와 사업체의 구인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으므로(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b),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구조상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고등교육의 세 요소, 즉 ‘구조의 개방화’, ‘학생의 다양화’, 그리고 ‘지역사회 평생학습 요구 충족’이라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사업으로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대학체제개편에 지속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에 대한 연구에 기반 한 제도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비전통 고등교육형태로서의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2008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기존의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체제를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대학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를 담당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기존의 학령기 학생 중심의 폐쇄적 대학체제를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을 위한 개방적 체제로 전환하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를 수준 높은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가진 지역 대학이 담당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인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학령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학습권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령기 인구 감소와 대학구조 개혁이라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고등평생교육의 기회를 지역 성인학습자에게 제공하고, 그와 더불어 지역산업 및 지역문화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성인학습자와 대학, 그리고 지자체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학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b).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본다면, 평생학습사회 맥락에서의 대학은 성인학습자와 같은 비전통적 학생들이 자유롭게 진입하고 회기 하여 평생학습을 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비형식적 고등교육체제이다(Schuetz & Slowey, 2000; NCIHE, 1997; 천세영·한승희, 2006; 최상덕 외, 2009). 이는 학령기학생을 대상으로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운영을 해 왔던 전통적 대학이 평생학습을 중심원리로 포섭하는 과정에 상당한 갈등과 변화가 요구될 것임을 예기한다. 따라서 평생학습중심대학을 조성함에 있어

서 전통적 대학의 운영원리와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운영원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운영원리의 차이가 대학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가.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개관

출산을 감소로 인한 대학입학자원 감소, 대학구조개혁의 움직임, 지식경제의 출현으로 인한 성인계속교육의 필요성으로 인해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2008년부터 추진되어 지속적으로 확대 성장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a).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시작된 2008년은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한 해로서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심이 고조되었던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2008년 9월 8억 원의 예산으로 7개 대학으로 시작하여 2013년 기준 259억 원의 예산, 50개 대학으로 확대되어 운영되어오고 있다. 사업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의 3자 연계체제를 기반으로 하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기본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실무를 담당하며 대학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2008년에서 2009년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과 대학체제개편 사업을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2009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지자체와의 협약을 필수로 하고 대응투자를 유도하며, 지역 성인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게 함으로써 평생학습중심대학과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09). 실제로 한 대학 당 하나 이상의 지자체가 지원협약 및 대응 투자금을 지원하였고, 2009년 1차 평생학습중심대

학 사업에서는 사업지원금 6.8억원에 더해 대학·지자체 대응 투자금이 4.17억 원에 달하는 등 지역 평생학습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과 책무성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09).

2010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서는 그동안 두 사업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일 연계를 위한 성인학습자 친화형 체제개편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1년 단위 지원방식에서 3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계속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성인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을 본격화 하였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0). 뿐만 아니라 체제개편에 대한 실적 관리와 사업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대학으로 하여금 3년 동안 추진할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실질적인 성과측정을 위해 추진전략 및 추진 내용을 구체화하였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0).

2011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서는 성인친화형 선도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대학 육성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까지 대학 평생교육원과 체제개편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것에서 체제 개편 형에 중점을 두고 선도대학 4개교와 평생학습 중심대학 20개교를 구분하여 지원하였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2012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서는 사업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1) 선취업 후진학형, (2) 4050세대 재도약형으로 구성된 트랙제를 도입하여 특성화 모델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각 트랙은 다양한 연령의 성인 학습자를 위한 일-학습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기업체-지역사회 등과의 파트너십이 사업성과의 핵심 요소로 주목되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2011-2012년 사업 결과, (1) 성인친화 지역산업 기반의 지역 공헌형 특성화 모형, (2) 전문계 고교 및 산업체 연계 선취업 후진학 모델등의 선도 모델이 창출 되었으며,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점인정 및 수업연한 등과 관련된 고등교육 법령의 개

정(안)이 마련이 추진되었다(평생교육진흥원, 2013).

2013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해이며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욱 확대되고 참여대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3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추진전략은 크게 학위과정과 비학위전문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위과정 유형에서는 (1) 성인 친화적 정규학과 개설 및 운영, (2) 지역사회 및 산업 공생발전 모델 창출, (3) 장학금 등 학습자 교육부담 약화를 위한 체제개편을 추진하게 되며, 비학위전문가 과정에서는 (1) 중견 전문 인력 대상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 과정 운영, (2) 교육단계별 현장전문 멘토단 밀착 지원, (3) 모니터링 및 취,창업 등 졸업 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전략으로 추진하게 된다. 참여자 현황으로는 평생학습중심대학 학위과정에 약 3,209명이 등록하였으며 이 중 여자가 52%이고 남자가 48%으로서 여성의 참여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비학위전문가 과정의 경우 총 1,729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평생교육진흥원, 2014b).

[표II-1] 2012년 2013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비교

구 분	2012년	2013년
예 산	55.08억 원	275.08억 원
대학 수	25개교	47개교
학과 개편 수	69개	139개
비학위 프로그램 수	320개	538개
학위과정 학습자	1,166명	3,209명
비학위과정 학습자	7,107명	11,318명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4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중 학위과정의 경우 기존의 2030 선취업 후진학 트랙과 4050 재도약 트랙이 새 틀에 따라 각각 후진학 거점형

과 성인계속교육형으로 변경되었다. 학과유형은 ‘성인학부’, ‘성인학과’, ‘성인학습자 별도반’, ‘계약학과’, ‘산업체위탁반’ 중 하나를 선택하되 성인계속교육형의 경우, 성인학과 또는 성인별도반이 반드시 2~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비학위과정으로는 사회적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직업영역과정과 베이비부머 등 중견 전문 인력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연계 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수료인원의 15% 이상이 반드시 취·창을 해야 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b).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실적 면에서 2014년 기준 총 139개 성인친화적 맞춤형 학과 및 전공이 개설, 총 3,209명의 신입생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비학위 과정인 현장중심 특화 프로그램의 경우 총 474개 특화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며 9733명의 수료자 중 1453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성인학습자의 취업을 위한 비학위 전문가 과정은 2013년 기준 13개 대학에서 64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되었으며, 수료자의 38%가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창업에 성공한 597명 중 50% 이상이 전문직, 서비스직, 관리직에 진출하는 등, 고용의 질에 있어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b).

나. 평생학습중심대학 운영 유형

평생학습중심대학 내 성인학습자 대상 학위과정 유형은 (1) 성인학부, (2) 성인학과, (3) 성인별도반, (4) 계약학과, (5) 산업체 위탁반이 있으며, 수료시 전문학사 학위가 수여되는 산업체 위탁반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과정이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b).

비학위과정 유형들은 (1) 지자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특화사업 인력을 양성하는 지역밀착형, (2) 대학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적 가치가 높은 직업영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공유가치 창출형, (3) 특

정 조건의 학습자를 선별하여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시키는 경력개발 파이프라인 구축형 으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해 수업연한 및 학사체제가 제한되는 학위과정보다 더 구체적이고 유연한 지역사회-산업체-대학 연계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b).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삶의 양식과 학습 요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학령기 학생 중심 대학체제에 대한 상당한 도전을 가져다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성인학습자 대상 학위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사체제와 고등교육법상의 수업연한, 획일적인 교수-학습 방법과 같은 기존의 형식성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이나 가사를 병행하는 성인학습자가 학령기 학생들과 같이 4년 이상의 학위과정을 지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성인학습자들의 숫자가 학위과정에 등록하는 성인학습자들 수의 3배에 달한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b).

정리하면, 평생학습중심대학은 대학은 기존의 학위과정을 성인학습자를 위해 학부, 학과, 별도반 형태로 개방하고, 비학위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성인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중심 평생학습은 단기 프로그램뿐 아니라 체계적인 이론 학습을 기반으로 고등학문분야를 탐색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위과정을 고등교육 소외계층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학습인정제도, 계약학과제도, 현장논문제도 등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계약학과

가. 계약학과 정의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여, 채용예정자나 재직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비학위과정(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위과정을 제공하는 제도이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는 대학의 인프라를 이용한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으로서 대학의 이론 중심의 교육 전통과 기업의 요구사항 및 현장경험을 반영하여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교육부, 2013).

계약학과는 2002년 발표된 ‘국가혁신체제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종전의 <산업교육진흥법>이 2003년 5월 27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학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새로운 학과·학부의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 또는 유사한 학과·학부를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약학과는 취업예정자 및 재직근로자들을 위한 직업능력향상 교육이 주가 되는 만큼,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설계·운영되고, 기존 정규과정에 비해 입학, 교육과정 운영 및 정원 등에서 융통성을 부여할 것이 제안되었다(박준경, 2001).

계약학과의 유형은 법률 상에도 나타나 있듯이 (1)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며 직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채용조건형’과 (2)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경비의 50% 이상을 산업체가 부담하는 ‘재교육형’으로 구분된다.

계약학과는 특별히 대학(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또는 지자체가 계약에 기반 하여 성인재직근로자의 직업계속교육을 대학의 학위과정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최상덕 외, 2009). 특히, 대학의 성인친화적 체제개편을 목표로 시작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학위과정 유형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

으며,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일환으로 개설된 성인친화적 학위과정 139개 중 34개가 계약학과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2014)

계약학과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3).

[표II-2] 계약학과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정의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국가·지자체·산업체등이 대학과 계약으로 설치·운영하는 제도
설치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학위과정)~제9조
유형	①(채용조건형)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재교육형)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 주체	산업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등)
경비부담 주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체 등이 부담
산업체 경력인정	교육과정 관련 근무경력에 대해 20/100 범위에서 학점으로 인정
학생 정원	① (채용조건형) 전체 입학생수 또는 입학 정원의 10/100 ② (재교육형) 별도 인정 (제한 없음)

* 출처: 교육부[취업지원과](2013)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2012년을 기점으로 약간 감소한 것에 반해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2009년 6,096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12,02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

중소기업-지방 중소기업청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3자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비, 시설비, 기자재비, 인건비 등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70%를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최동선 외, 2013).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대학을 지역사회 평생학습 거점으로 개편하는 과정으로서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가 요구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대학기반 계속교육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도 같은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계약학과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최동선 외, 2013).

[표II-3]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및 재직자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원격대학(단,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평가 미참여 종교계 대학 제외) -학생: 참여할 학과와 관련된 분야 중소기업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제조 및 지식기반서비스 관련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근로기준법 제 11조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 5인(대표자포함) 이상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수강료, 전담직원 인건비, 시험재료비 등) 지원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피용한 경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며 학생 1인.학기당 최고 5백만원 이내(정규 유사학과 대비 150%내외) 지원 -정부 지원금 외에 나머지는 참여 중소기업과 학생이 부담하되, 학생 부담금은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규모	-2012년 기준 55억원

지원조건	-대학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단위) 내 또는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에 지원가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참조
------	--

* 출처: 최동선 외(2013)

나. 계약학과 유사제도

계약학과 유사제도로써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제, 사내대학 등이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재직자를 위한 계속교육제도라는 점에서는 계약학과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법적근거, 설치주체, 산업체범위, 교육여건, 경비부담, 정원, 입학자격 등에서 차이가 있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고등교육법> 제4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2항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주체는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이다. 설치절차는 대학과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계약학과와 동일하지만 경비부담에 있어서 산업체가 50%~100%를 부담하는 계약학과와는 달리 학생 부담 100%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2000년도를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도 이후 위탁생수·참여업체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습자 입장에서 교육비 부담과 고등교육 보편화로 인해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뿐 아니라, 그 이상의 학위과정을 선호하는 성인학습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심화과정은 2008년 전문대학에 개설되었으며, <고등교육법> 제50조 2항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재직자가 계속교육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제도로써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실무 및 기술 중심 심화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은 동일계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학사과정은 전문대학학위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운영해야 하며, 학점은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과 합하여 140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 졸업→취업→전공심화과정이수→학사학위취득'의 경로를 통해 전문대 졸업 재직자들의 계속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계열별 전공심화과정 운영현황을 확인해 보면, 공학이나 자연과학보다 인문사회계열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전공심화과정이 전문대학 졸업 재직자의 학위취득에 상당부분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간제 등록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정규과정에 입학할 수 없는 자에게 계속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하여 1997년 3월부터 도입되었다.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 한다. 시간제 등록제는 시간제 학생들과 정규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도록 하는 운영구조로 인해 성인학습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불편하다는 문제제로 인해 2008년 9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간제 등록생 만으로 편성되는 모집을 허용하고 시간제 등록생이 매 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도 기준학점의 2분의 1(9학점)에서 12학점으로 증대하였다. 2008년 9월은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처음 시작하던 시기로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취득학점에 대한 관리기제가 거의 전무하고, 일부 대학과 대행업자들에 의해 편법 운영됨으로써 수업의 질 관리가 보장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III. 평생학습중심대학 사례 분석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전략은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연도별 사업목표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취업률, 충원을 제고와 같은 정량적 지표에 상당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의 초점이 성인학습자에 맞는 교육 건을 조성하도록 대학 체제개편을 유도하는데 맞추어져 있다면, 2012년 사업부터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서 대학이 생애주기별, 계층별 취업친화적인 평생교육 기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사례대학들의 경우, 2013년 사업에 선정되어 한 해를 보내고 2014년 연차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전략은 2013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목표 및 사업 선정 지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목표는 성인학습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대학 내에 조성하는 것이었으며, 사업선정에 있어서 중점적인 평가항목은 지역사회·산업체 요구에 따른 체제개편, 학습자 선발 계획, 현장실습 등 취·창업 지원 체제 현실성 등이며,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취업연계 사업 실적이 있는 대학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참여대학의 성격 및 지리적 특성에 따라 같은 평생학습중심대학이지만 다양한 유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었던 A대학의 경우, 지역, 산업체, 개인 성인학습자들의 수요를 폭넓게 수용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학습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경

기관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B 대학의 경우, 소규모 지역사회에 위치하여 지역 평생학습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대구경북권 사립대학인 C 대학은 산림자원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위치하여 잠재된 향토 산업을 발굴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대구경북권 전문대학 D 대학은 산업단지가 입주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내 산업체의 수요 맞춤형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처럼 평생학습중심대학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의 압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육수요를 부분적으로 담당하면서 대학기반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을 구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 사례대학들이 참여한 동기, 사용하는 전략 분석을 통해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을 도출해 보고,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지속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참여 동기

A대학의 경우, 지역 유일의 국립 거점대학으로서 지역의 성인계속교육수요가 자연스럽게 대학으로 수렴하는 상황에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한 사례이다. 2013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인근 지역과 협약관계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 평생학습기관으로서 폭넓게 기능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 내 전문계고 진학률이 24.8%(전국 평균 21.7%), 취업자 학력 분포 상 고졸비율이 40%가 넘는 등 선취업 후진학 잠재수요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국립대학의 특성상 대학구조개혁의 직접적인 타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빨리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대학은 지역 유일한 4년제 국립 거점대학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요구를 많이 수용하게 되는 것이 저희 대학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대상 교육, 문화, 복지 중심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구요. 저희 지역주민들의 경우는 꾸준히 자체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취업자 학력분포에서도 고졸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이 지역자체가 대학졸업자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학위취득 요구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A대학, 지역국립대학)

B 대학의 경우, 지역사회가 작아 대학이 지역 행정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성인학습자들의 교육수요를 흡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위과정에 진입하는 성인학습자들을 지역사회 리더로 양성하는 등, 지자체의 수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역 평생학습에 있어서 지자체와 수시로 만나서 그들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학차원에서 지원합니다. ... 중앙부처에 대한 자문위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가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지역리더로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으로 진출시키기도 하는 것 까지 다 연계해서 생각해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 대학, 지역사립대학)

C 대학은 대학입학자원의 감소와 대학구조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학습을 선택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지역 고유의 천연자원과 향토문화산업 개발에 있어서 잠재적인 취창업 기회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계획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등 다양한 지역

평생학습 포트폴리오를 갖춘 대학이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이 학령기 학생 외에 다른 학습자들을 유치해서 학령기 인구 감소에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문화자원이라든지 관광자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저희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았습니다.”(C 대학, 지역사립대학)

D 대학의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의 유일한 전문대학으로서, 사업 참여 이전부터 지역 산업체의 재교육이나 지역 평생교육원으로부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수탁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지자체 평생교육원과 산업공단 내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지자체 평생교육원은 교양강좌나 문화, 사회복지 분야 취업수요에 맞춘 과정을 운영하고 산업공단 내 평생교육원에서는 산업체 근로자들의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운영합니다. 어찌다 보니 저희 대학이 이 두 기관의 교육과정을 위탁 받아 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다 보니 대학중심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D 대학, 지역전문대학)

그 중 주된 이유가 지역 공단의 경력 단절 여성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은 대학이 산업체의 필요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잠재적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 공단에서 일하는 11만명의 여성 근로자 중 결혼이나 육아로 인해 조기경력단절을 경험한 7만명의 여성근로자들의 재취업 및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이 사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D 대학, 지역전문대학)

이처럼 참여대학들은 대학입학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성인학습자를 새로운 대학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성인학습자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의 특유의 교육수요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대학의 발전방향과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의 목표가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판단 아래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2. 평생학습중심대학 운영 전략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참여대학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국립, 사립, 전문대학과 같이 설립목표와 대학이 입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맞물려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었던 A 대학의 경우, 지역, 산업체, 개인 성인학습자들의 수요를 폭넓게 수용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학습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경기권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B 대학의 경우, 소규모 지역사회에 위치하여 지역 평생학습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대구경권 사립대학인 C 대학은 산림자원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위치하여 잠재된 향토 산업을 발굴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대구경권 전문대학 D 대학은 산업단지가 입주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내 산업체의 수요 맞춤형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처럼 평생학습중심대학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의 압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육수요를 부분적으로 담당하면서 대학기반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을 구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사례 대학들은 지역이나 지역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성인학습자라는 새로운 학생자원을 흡수하고 지역평생교육 거점으로서 자신의 역할모델은 형성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사례대학들이 이전부터 해 오던 지역평생 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학 체제 내에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는 기회로서 학령기 학생 감소와 맞물려 활성화 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가. 사례대학 A

A 대학은 지역거점국립 대학으로서 3개의 권역별 캠퍼스를 운영하는 듯 규모나 재정 면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 국립대학이라는 비교우위를 통해 대학-지역사회-산업체와의 활발한 연계 안에서 학령기, 비학령기 학생 모두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되고 있었으며, 산학연계의 일환으로 계약학과도 다수 운영되고 있었다. 평생학습중심대학에 참여하는 몇안되는 국립대학으로서 학령기 학생과 성인학습자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저희 사업의 비전과 목표는 지역의 특성화 인재 양성, 성인친화적인 열린 대학구축, 지역, 대학, 산업과 평생학습을 연계시키는 겁니다. 산학과 관학의 연계도 추진하고 있구요.” (A 대학, 지역국립대학)

A 대학의 경우, 지역 내 유일한 거점 국립대학으로 지역사회의 교육 수요를 담당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 왔으며,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일자리 연계를 위해 지역 산업체 담당자와 지자체 일자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교육 복지, 문화 분야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인턴쉽, 지역기관 활동 등 지역형 일자리 취업과 연계하기도 하였다.

“저희 대학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학습형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유일한 4년제 국립 거점대학이죠.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의 교육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대학 졸업자의 수가 낮기도 하고요. 특히 지역에 기반 산업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향토산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고요, 교육이나 복지분야에 관련된 일자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A 대학, 지역국립대학)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집단으로 참여하거나, 평생교육원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대학 체제를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을 경험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운영을 위한 여러 전략들을 축적해 왔으며, 지역사회와도 긴밀한 협력 및 지원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거나 하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는 능력도 지역 대학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지원하기도 해요.” (A 대학, 지역국립대학)

특히 대학이 가지고 있는 상대 우위적 차별성으로서, 사설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의 강좌들을 위탁받아 수행 하면서 대학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사설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하기 어려운 인문강좌들이 있습니다. 대학은 그런 종류의 과정을 운영하면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죠.” (A 대학, 지역국립대학)

또한 A 대학의 경우, 산업체를 위한 특화 성인학과 및 계약학과를 다수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3년 개설된 선취업 후진학 일반학과는 3개, 계약학과는 9개, 산업체 위탁과정은 62에 달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교육수요를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다수 개설하여 운영하는 하고 있었다. 이처럼 A대학은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지역 국립대학이라는 강점과 안정적인 자원 수급뿐 아니라 대학구조조정에서 지역 사립대학보다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사례대학 B

B 대학의 경우,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의 특성상 지자체의 활동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며 지역평생학습의 수요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봉사의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정규 학위과정과 연계를 통해 졸업생들이 자연스럽게

대학원과정까지 밟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여 지자체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저희는 입학생들을 잘 트레이닝 시켜서 행정대학원 같은 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까지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지역사회가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역리더로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으로 진출시키거나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연계해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B 대학, 지역사립대학)

또한 지역사회 특성상 1:1로 계약학과나 산업체 위탁교육을 의뢰할 만한 규모의 사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관계구축을 통해 경제인 협회나 중소기업 협회 등 여러 개의 기업들과 공동 협약을 맺어 학과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우리대학의 경우에는 지역에 산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학과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 경제 협의회 같은 곳에 등록되어 있는 몇 십 개 되는 기업들이랑 협약을 맺어서 한 직장에서 한두 명씩 올 수 있도록 계약을 합니다.”(B 대학, 지역사립대학)

또한 고용보험금 환급,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의 정부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학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다각화 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세히 알아보시면 정부 지원제도가 참 많습니다. 대학 시설을 개선하거나, 교육지원을 받거나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

니예요.” (B 대학, 지역사립대학)

뿐만 아니라 D 대학은 지역사회의 규모로 인해 충분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 지원 및 대학본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친화형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대학 기반 공동창업 등을 통해 성인학습자들의 다양한 경로의 취창업을 돕고 있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면 고용노동부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조합을 만들면 졸업생들이 창업하고 싶은 졸업생이나 대학생, 지역주민들까지 같이 사업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사재를 털어 가족기업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학부생들 취업률을 단기적으로 높일 수 있구요. 물론 장기적으로도 높일 수 있습니다.” (B 대학, 지역사회립대학)

이렇듯 B 대학의 경우, 졸업생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대학이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창업을 하는 등 대학 본부 차원에서 성인학습자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학 리더십의 적극적인 지원은 B 대학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을 담당하는 평생교육대학 교학팀이 총장 직속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학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사례대학 C

C 대학이 위치한 지역은 향토 특산물 및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으로서 지자체와 연계를 통해 문화자원 또는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사업화 하

는 맞춤형 학과 및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었다. 때문에 대학은 지역 주민들의 생계 사업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산업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인큐베이터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우리 지역에는 향토문화자원이라든지 관광자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저희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생태관광자원을 해설하는 스토리텔링 특화 프로그램도 개설을 했습니다. 생태관광해설사 같은 걸 양성하면 지역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지역산업 특화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국고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아주 심화된 프로그램도 지원해서 취창업까지 연결되도록 하고 있구요.”(C 대학, 지역사립대학)

C 대학의 경우, 산업체 계약이나 위탁을 통한 학과를 개설할 여건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학위과정보다는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산업 연계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특화 프로그램 참여 후 계속 교육을 희망하는 수료생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학위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체제 내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우리 지역 특화 상품을 사업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수료하면 단장 명의로 수료증이 나가고요, 이렇게 해서 취 창업하고 실질적으로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요, 특화 프로그램 수료자들이 편입을 원하면 그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C 대학, 지역사립대학)

또한 학습단절을 오래 경험한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비과정을 밟도록 배려하고, 평생지도교수 체제를 구축하여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생활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체제도 마련하였다.

"학습 단절자들이 대학에 진입하면 학업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월에 예비대학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입학전형, 장학제도도 따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지도교수를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유지하는 평생지도교수 체제로 만들기도 했습니다."(C 대학, 지역사립대학)

C 대학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단은 교무처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사업단장이 교무처장을 겸직하면서 성인학습자 대상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학칙변경 등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우리대학 사업단은 교무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4050 세대 대상으로 평생학습, 학위과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교무처에서 개설이라든지 학칙이라든지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C 대학, 지역사립대학)

이처럼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표방하는 대학본부 중심의 체제개편은 대학의 리더십이 체제개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수월하게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사례대학 D

공단지역에 입지한 D대학은 대학 경영의 중심을 산업계와의 연계에 두고 산업계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공급을 위해 교무처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을 상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의 사례대학과 마찬가지로 D 대학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체제개편이 대학 본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저희 대학은 모든 교수님들, 또 학교의 모든 조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공단으로 대표되는 산업체와 우리학교의 연계성입니다. ... 우리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전에 산업체와 고용예약을 꼭 합니다. 이 고용예약을 하다보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교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 개편을 상시로 합니다. ... 산업체 요구만 있으면 교육과정을 즉각 개편합니다.”(D 대학, 지역전문대학)

D 대학은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교무처를 중심으로 강력한 교수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시킴으로서 이러한 교육운영 방침을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었다.

“계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 동의를 얻는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대학에서는 이를 위해 참여에 적극적인 교수님들께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그렇게 20년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까지 된 것입니다.”(D 대학, 지역전문대학)

특히 지역 산업체의 구체적인 구인수요 기반으로 먼저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고용예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가적인 대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지역 산업체 수요조사 결과를 보니 공단의 인사담당자들이 50% 추가 채용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구인수요는 확인되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과 협력해서 공동으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결정이 된 거죠. 이왕 결정이 되었으니까 원하는 과정을 짜 달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채용을 해 줘야 한다고 협약을 했죠.”(D대학, 지역전문대학)

고용예약 교육과정은 산업체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도 직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미스매치를 최소화 하고자, 교육 과정 개발에 있어서도 실무자들과의 긴밀히 협의하는 문화를 보여주었다. 산업체 관계자들과 2박 3일 동안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기도 하였으며, 산업체와 고용계약을 하면서 기초과목을 대폭 줄이고 현장실습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임교수는 기초이론과목을 담당하고 산업체 재직자를 강사로 하는 1강좌 2교수제도를 학칙에 반영하는 등 학사체제를 그에 맞게 개편하였다.

“산업체 실무진들과 2박 3일 동안 협의를 하였습니다. 실무진들의 요구는 이론은 필요한 만큼만 하되, 현장실습과목을 늘려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전임교원들은 기초과목을 맡고, 현장실습 교육과목은 산업체 재직자 분들이 맡

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강좌 2교수제를 학칙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과목만 넣다 보니 남은 학점들은 다학점제로 보완하였습니다.” (D 대학, 지역전문대학)

이렇듯 D 대학은 전문대학의 입장에서 양질의 취업인력이 현장에서 인정받으면, 충원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지적하면서, 양질의 맞춤형 취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충원을 보장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양질의 취업 인력을 양성하고, 그래서 취업이 잘 되면 또 양질의 입학자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저희 대학은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D 대학, 지역전문대학)

이처럼 D 대학에서는 취업률 제고와 지속적인 충원을 위해 산업계와의 연계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연계를 유지하기 위해 산업계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D 대학은 대학의 리더십이 적극적으로 체제개편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업무구조를 굳혀가고 있었다.

3.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특징

이와 같이 평생학습중심대학 참여대학들은 대학의 여건과 소속된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략모델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A 대학의 경우 지역거점 국립대학이라는 비교우위를 사용하여 지역사회, 산업체,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를 담당하고 있었고, B 대학의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지역사회 안에 위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기반으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비학위 프로그램이나 학사학위과정 졸업생들이 상위 학위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리더로 성장, 결국 지자체와 대학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C 대학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잠재된 향토 산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인력양성수요를 함께 창출하고자 하는 전략을 보여주었으며, 지역개발 거점으로서 자리를 잡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에 산업기반이 충분하지 않음을 직시한 대학이 지역의 산업 잠재력을 발굴하여 평생학습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발전거점으로서 교육수요와 졸업생 취창업 연결, 지역사회 사업 개발이라는 복합적인 역할모델을 채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 대학의 경우에는 지역 산업단지 입지와 전문대학이라는 특성을 잘 살려 지역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공급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D 대학은 지역산업체나 지자체에 먼저 손을 내밀고 수요자 맞춤형, 고용예약 형 교육과정을 직접 제안하는 등 네 개 대학 중 가장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사례대학은 지역 성인학습자 유치와 지역사회 및 산업체 교육 수요 확보, 그리고 졸업생의 취업과 창업에 있어서 대학의 여건 및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특성화된 전략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례대학 모두 평생학습중심대학으로의 체제개편에 있어서 대학

본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체제개편의 수월성과 지속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였다. 특히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담당부서가 총장 직속이거나 재정의 운영권, 제도적 결정권, 대학 구성원의 인사권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업운영 부서의 조직 내 권위는 체제개편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C 대학과 D 대학의 경우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 교무처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제공 되는 등 대학 리더십의 지원이 두드러졌다. 네 대학의 사례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III-1] 사례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전략 특징 요약

대학	특징
사례대학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전문계고 졸업생 대상 선취업 후진학 학과운영 재직자 대상 산업체 위탁교육 및 계약학과 운영 지자체 평생학습사업 자문 및 협력
복합형	
사례대학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평생학습사업 자문 및 협력 지역 리더 양성 통한 지역연계 강화 졸업생 및 수료생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창업 지도 평생학습중심대학 전담 교원 및 행정직원 채용 취업 캠프 운영
지역사회 리더 양성형	
사례대학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향토산업 및 관광사업 관련 특화프로그램 운영 성인학습자 4년 전담교수 지정 취업 캠프 운영
향토산업 개발형	
사례대학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예약제도 실시 산업체 수요 맞춤형 커리큘럼 실무진과 공동개발 다학점제, 1강좌 2교수제, 선택형 평가제 사용 교수인센티브 제도
지역산업 구인수요 맞춤형	
공통점	
1) 대학 본부 중심 체제개편(총장 직속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단 운영) 2) 성인학습자를 위한 유연한 체제개편 및 학습지원 제공 3) 지역 및 지역 산업체와 적극적인 연계체제 구축	

4.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개선해야 할 점

사례대학들의 참여 동기와 전략은 사례대학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했지만, 특히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가 확연했다. 국립대학의 경우, 선취업 후진학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요와 재직자 재교육 수요가 모두 대학으로 수렴되는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지역 성인학습자 및 지역 산업체 수요를 직접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평가구조가 아직까지 학령기 학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지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충원율 및 취업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특히 성인학습자의 특성 상 교육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취업의사가 없는 학습자들이 입학할 경우, 충원율은 해결되지만 취업률은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2013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개선점으로서 지적되었으며(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고등교육 부문에서 성인학습자를 대학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성인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III-2] 2014학년도 평가 지표 및 배정

지표명	4년제대학	전문대학
취업률	15%	20%
재학생 충원율	25%	25%
전임교원확보율	10%	7.5%
교육비환원율	12.5%	10%
학사관리및 교육과정	12.5%	12.5%
장학금지급률	10%	7.5%
등록금부담완화	10%	7.5%
법인지표	5%	5%
산학협력역량지수	-	5%

또한 대학들은 성인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 제도를 간소화 하는 등 충원율과 취업률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성인학습자의 특성상 구체적인 교육수요를 가지고 계속학습을 선택하는 만큼,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경우, 평가지표의 비율이 학령기 학생 중심 대학과는 차별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교육과정의 질적 측면을 보장할 강력한 기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성인학습자의 역량을 개발시키고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수요를 만족시킨다기보다는 성인학습자의 학력 인플레이를 조장할 수도 있다(최상덕 외, 2009). 따라서 대학이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육체제 질 개선 시스템을 개발하여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중요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도입과 정착에 있어서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지속을 위한 재정지원 통로의 다양성과 교육과정 및 운영에 대한 책무성 보장이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아직 제도화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지원이 중단될 경우 대학체제개편을 지속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책무성에 보장이 있어서도 사업평가 말고는 강제할 기제가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재정을 다양한 주체가 부담하고 교육운영에 대한 책무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IV. 평생학습중심대학 내 계약학과의 역할

앞장에서 다룬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전개과정 탐색을 통해 평생학습중심대학의 특성과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개선점에 있어서 각 대학이 처한 환경의 문제와 대학평가지표에 대한 문제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대학들이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라는 지지대를 제거하더라도 평생학습중심대학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제를 고민하는 것은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수혜자의 만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은 체제개편을 지속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제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맥락에서 2003년 처음 시행된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학기반 산업체 수요맞춤식 교육지원 제도인 '계약학과'가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생태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계약학과의 제도적 요소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교육에 관련된 법률과 고등교육에 관련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 내 산업교육-고등교육 접점을 만들어 내며,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추후 평생교육법과도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계약학과 제도 및 유관 제도를 분석하는 것을 통

하여 계약학과와 제도적 요소 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계약학과와 제도적 요소가 타 제도와 어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제도화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가. 재정분담을 위한 제도적 요소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등 다양한 유관법률에 의해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6항에 따르면 계약학과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학습자의 부담금을 100분의 50 이하로 보장될 뿐 아니라, 대학의 장학금 제도가 더해진다면 산업체와 학습자, 대학의 재정분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2010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청, 대학, 기업의 3자 계약에 의한 재정분담이 이루어졌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지방 중소기업청장, 주관대학 총장(지방대학에 한정), 참여기업 대표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교육운영비용의 70%를 담당하고 학생 및 기업이 나머지 30%를 담당하게 되며, 학생 부담금이 기업부담금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재정분담에 있어서 정부는 계약의 주체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계약학과를 통해

직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을 준용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 한도 내에서 교육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계약학과 운영 시 운영비용의 100분의 50을 담당해야 했던 기업의 부담을 덜고, 계약학과를 통한 직원교육을 지속하게 하는 재정분담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학과 운영비용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장 직접국세의 제104조의 18항에 따라 대학 맞춤형 교육으로서 세액 공제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64호 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있어서도 계약학과 재학 중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있어서도 3순위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계약학과는 계약을 통한 정부, 지자체, 산업체, 대학, 학습자 간의 재정분담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우선지원기업이 재직자에게 학위취득과 계속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에 비해 재정기반 및 교육훈련제도가 취약한 중소기업 내 학습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최동선 외, 2013).

나. 운영관리의 책무성을 위한 제도적 요소

‘계약’은 계약에 참여한 주체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인 제도적 조율을 전제로 한다.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서 기업이 대학에 재직자 교육을 위탁하고 그 내용과 방식, 그리고 시간을 정했다면, 대학은 새로운 유형의 학습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기존의 학사규칙을 개편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은 위탁한 재직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근무시간 조정, 학습비용 지불 등의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대학에서의

성인계속교육, 특히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대학과 기업이라는 두 계약당사자의 상호적 조율과 개편을 요구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중심대학 내 계약학과는 대학차원에서의 체제적 개편뿐 아니라 재직근로자가 속한 기업의 지원문화를 조성하는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학과 운영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으로 분류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해진 입학기준, 입학정원, 그리고 산업체 부담금 비율(100분의 50)이 위반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 2 의 기준에 의해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또는 학생정원 동결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계약학과의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계약학과 운영요령이 정비되어 있으며,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운영규칙을 개선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계약학과 현황 등 정기 보고(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신설)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각 대학의 계약학과 운영 실태 파악 및 관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매년 5월말까지 운영 현황과 자체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는 기제를 마련하고 있었다.

2. 계약학과 운영과 대학의 역할

계약학과의 경우, 교육 요구조사와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이 학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활동은 대학체제라는 학습생태계의 협조와 지원을 기반으로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대학(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등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 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특히, 학생선발기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수업방식 등이 모두 계약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의해 정해지고 학칙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의 맥락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의 질이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중소기업 계약학과 발전방안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최동선 외, 2013)에서는 이제까지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사업은 지나칠 정도로 대학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사업단별로 계약학과 운영 성과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체제는 계약학과의 제도적 요소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생태계'가 될 수도 있고 '한계'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계약학과에 진입하는 학습자 유형이 대개 취업예정자 또는 재직자로서 구체적인 교육수요를 가진 성인학습자라는 점을 감안 해 볼 때, 학령기 학생 중심 대학체제는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서 생태계보다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같은 연구(최동선 외, 2013)에서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및 참여 학생이 인식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관심분야와 밀접한 학과나 전공을 인근 지역에서 찾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는 지역 대학이 지역사회 산업체 및 성인학습자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학과 제도의 목적이 '산업체 수요에 의한 맞춤형 직업교육체제 (Work to school)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실용적 인재양성에 탄력적으로 대응'(교육부[취업지원과], 2013)하기 위함이며,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에서도 '주관대학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게 참여기업 등의 요구사항 또는 의뢰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편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계약학과 제도의 본래 취지가 가장 잘 발현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량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령기 학생 중심의 기존 대학체제 또한 재직 성인학습자를 위한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최동선 외, 2013).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령기 학생들에게 맞추어 2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들에게 현행 2학기제 운영은 졸업학점 이수나 재학연한 면에서 계약학과 참여를 고민하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최동선 외, 2013). 따라서 재직근로자를 위해 방학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3학기제 또는 4학기제 같은 다 학기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 또한 대학 차원의 학사제도 유연화 노력이 요구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은 계약학과 운영의 질과 성격을 평가하는 맥락으로서 대학체제가 계약학과의 주 대상인 성인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개편되지 않는다면 계약학과와 관련된 제도적 지원들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참여대학의 사례는 계약학과 운영이 가진 한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대학 본부 차원에서 대학체제를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을 위해 개편하는 활동으로서 참여대학들은 지역 사회 및 산업체의 교육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지역-산업체-대학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의 학령기 중심 학사체제를 유연화하는 노력을 2008년부터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앞장의 사례분석에 따르면 해당 대학들은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개발과 유연한 체제개편을 위해 본부 차원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거점 국립대학이었던 A대학의 경우, 계약학과를 다수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역사립대학 B대학의 경우도 교무처가 중심이 되어 성인학습자나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칙을 변경하는 면에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C대학의 경우에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담교원을 초빙하였고, 지역 산업공단에 위치한 D대학의 경우, 고용예약에 의한 맞춤형 교육과정 공급에 있어서 교무처를 중심으로 교수 인센티브제도 등을 시행하는 등 체제개편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학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평생학습중심대학에서의 계약학과 운영은 대학본부 차원에서 성인학습자를 위한 체제적 지원과 지역 사회 및 산업체 연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학령기 중심 대학에서의 계약학과 운영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평생학습중심대학 내 계약학과의 역할

가. 평생학습중심대학과 계약학과의 관계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계약학과 제도는 대학을 기반으로 성인학습자들이 계속교육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a; 교육부[취업지원과], 2013).

그러나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성인학습자를 대학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존의 학령기 중심 대학체제를 다양한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면, 계약학과 제도는 대학체제를 이용하여 활동하는 계속직업교육 기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환경과 그 환경에서 작동하는 기제로서 평생학습중심대학과 계약학과 제도의 역할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산업체가 적거나 한 개의 학과를 개설할 수 있는 만큼의 학생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데 일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차적으로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LINC 사업과 같은 산학협력 사업에서 계약학과가 이중적으로 성과 산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중심대학에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공급하기를 기대하는 만큼 재직자나 채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학과 특성 상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을 지양한다는 평가가 참여대학 내 공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평생학습중심대학 관계자들 또한 계약학과는 산학협력을 위한 제도이지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된 방식은 아니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사례대학들은 계약학과 운영 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은근한 기대를 하면서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평생학습중심대학에서 성인반이라는 것이 계약학과 사업으로 추진만 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 모집)하기도 좋고 수업에서도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교육부나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계약학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담회 참석자 A)

예를 들면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서 산업체와 대학 간의 연계를 통해 직무와 관련된 계속교육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가 직무능력 향상교육이기 때문에 평생학습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언급이나, 본질 상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좋아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준다고 하는 등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계약학과는 직무능력향상교육이거든요. 그러면서 학위도 주기 때문에 평생교육 관점에서 일부는 맞지만 본질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진흥원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담회 참석자 B)

이러한 모순적인 현상은 계약학과 특성상 대학체제 개편 없이도 일반

대학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체제 개편에 중점을 두었던 초기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서는 핵심 전략으로 는 권장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체제개편 사업이 안정기에 들어간 2014년 사업계획에서는 성인계속교육을 위한 학과와 계약학과 및 성인학과 개설이 취업예정자 및 재직자의 직무능력개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전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F&Q를 살펴보면 대학이 운영해 오던 계약학과나 산업체위탁과정을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 포함시켜도 되느냐는 문의가 있을 정도로 계약학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중심대학 내 계약학과 개설 수가 2012년 20개에서 2013년도 34개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계약학과가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III-3] 2012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정규학과 개설현황

구분	성인학과	별도반	계약학과	산업체위탁반	기타	합계
학과수	16	64	34	13	12	139

*출처: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2013)

[표III-4] 2013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정규학과 개설현황

구분	일반학과	계약학과	산업체위탁반	편입학반	합계
학과수	33	20	4	12	69

*출처: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2014)

이러한 상황은 평생학습중심대학과 계약학과 제도 간 과도기적인 갈등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70-5)인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교육 지원체제 확충'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대한

관심이 평생학습중심대학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1) 지역사회-대학-산업체 연계와 (2) 계약학과를 포함한 성인학과(부) 개설을 골자로 하는 만큼 계약학과와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나. 평생학습중심대학 내 계약학과의 기대역할

계약학과를 개설하기 위해 산업체를 모집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요구에 맞게 학사체제를 개편하고, 현장중심 교강사를 초빙하는 문제는 학과의 역량 이상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 때문에 본부중심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은 대학체제 내 계약학과 뿐 아니라 산업체 및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여타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계약학과 제도의 관계를 '환경'과 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기제'라는 면에서 상보적인 관계로 보았으며 평생학습중심대학과 계약학과 제도의 전략적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 연구의 3장에서 분석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례에 의하면 평생학습중심대학들은 기존의 학령기 학생 중심 체제를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받아들이기 위해 본부차원에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총장의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었다.

그러나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실행이고 전체 체제를 개편한다는 점에서 재정적 지원이 지속가능성의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서는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지속가능한 체제개편을 위해 지역-산업체-대학의 연계체제 강화를 매 사업계

획마다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보호에 대한 대학의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계약학과 제도는 운영비용에 있어서 정부, 대학, 산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주체들 간의 재정분담과 방만한 운영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안정적 제도화를 촉진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육비용에 대한 면세제도나 우선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금 환급제도가 함께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문제에 있어서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학과의 운영은 계약학과가 설치되는 대학의 협조와 노력에 따라 계약학과의 성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최동선 외, 2013). 이러한 점에서 계약학과 제도는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성인학습자 친화적 생태계에 심겨질 경우, 본부차원의 체제개편 지원과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획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계약학과의 제도적 요소를 장착하므로 교육운영에 있어서 정부, 대학, 지자체 등의 계약 당사자들과 재정을 분담할 수 있고 운영관리에 있어서 법적 책무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체제개편의 지속성과 교육운영의 탄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보적 체제로서 충분한 시간 동안 반복될 경우, 평생학습중심대학 제도화에 있어서도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V. 논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80% 이상이 상위 학교에 진학하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 사회에서 학위의 부재가 의미하는 삶의 한계를 제대로 목격한 세대이다. 이러한 고등교육 보편화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출한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이제 학령기를 벗어나 성인기에 들어섰으며, 지식경제와 유연화 된 노동시장이라는 근로환경에서 계속 노동을 위한 학습을 강요받고 있는 세대가 되었다. 즉 지금 세대는 고등교육 의무화 세대이기도 하지만 입직시 가장 큰 홍역을 치루는 세대이기도 하고, 대학에서 배운 것들이 일터에서 쓸모없다고 한탄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일도 해야 하고 배우기도 해야 하는, '학습경제' 내 '학습노동자'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는 80년대 말 고등교육 정책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고등교육 정책이 경제적 수요보다 국민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유례없는 고등교육 팽창이 이루어졌고, 급격한 양적 팽창을 경험하면서 고등교육의 질 저하와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김영화, 1993; 박환보 외, 2009). 뿐만 아니라 Trow의 고등교육 발전단계(Trow, 2006)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2007년 이미 고등교육 이수율이 82.8%에 이를 정도로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졌지만, 학령기 학생 위주의 팽창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성인학습자들은 고등교육 보편화 과정가운데 소외집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평생학습을 위한 고등교육 개혁의지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초 등장한 개방대학(Open University)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학습자들에게 대학을 기반으로 한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평생교육과 개방대학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학계, 문교부, 국회, 그리고 대학관계자들의 이해가 상이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정체성 확립에 있어 기반이 부족했고, 당시 고등교육 팽창이라는 사회적 맥락과 맞물려 점점 학령기 대상 일반대학으로 변모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신현석, 2005). 결국 개방대학은 정부의 개혁 의지 부재와 양적성장에 따른 재정확보 실패, 교육내용과 실제 산업계의 요구와의 격차로 인해 1997년 고등교육법 개정과 함께 산업대학으로 전환되었다(신현석, 2005).

2008년 시작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또한 개방대학과 비슷한 취지로 출발하였지만,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하는 등 사회 내 평생학습에 대한 담론이 더 성숙한 상태에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자원 감소는 학생 부담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학령기 학생 중심의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들의 개혁 의지를 더욱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구조상 대학 체제개편을 위한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본부의 리더십을 강조한 것도 효과적인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매칭 펀드를 의무화 하는 등 지역 대학을 더 이상 학령기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거점기관으로 전환하려 했다는 점도 이 사업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학습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서 간접 지급되는 등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고 할 수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08).

그러나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 학습자를 위한 체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의 지속성에 있어서 재정문제는 체제개편

을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서, 안정적인 재정공급을 위해 지원 주체의 다각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수혜자인 성인학습자들과 노동시장의 만족도가 지속적인 자원 확보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시작되었던 2008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양적 성장을 하고 있는 계약학과 제도에 주목하였다. 먼저는 계약학과의 제도적 요소가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뼈대가 된다고 보았고,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성인 친화적이고 유연한 대학체제가 계약학과와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계약학과 제도가 고용노동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도 다각화 되어 있었고, 법률에 의거하고 있는 만큼 운영에 있어서도 책무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두 체제의 조합이 수혜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혜자들이 어떤 학습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그 필요에 가장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반응한 교육계의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학습방법의 혁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요람부터 무덤까지’ 제대로 된 학습생애를 살 수 있는 합리적인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유레카를 외치기 전에 한국사회에서의 평생학습의 의미와 ‘학습 노동자’들의 불안과 분투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평생학습은 8시가 넘어서 퇴근 길 지하철에 오르는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동의 피로를 씻어주는 학습이라는 이름의 샤워인가 아니면 ‘평생학습’으로 포장된 노동의 연속인가?

평생학습을 고민하는 데 있어 이 사회에서 성인학습자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의 삶의 환경은 어떠한지, 그 맥락에서 학습은 무엇을 의미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학습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평생학습'은 이 사회가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들(고용환경, 복지제도, 교육문제 등)을 학습자들에게 떠넘기는 고상한 개념에 불과하다. 평생학습은 짐을 더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고등교육체제는 형식교육체제와 평생학습사회가 만나는 접점으로써 변화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시작은 위에서부터 하지만 결국 교육체제의 충위를 이루는 각 단계가 기초부터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계약학과 같은 제도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수요를 흡수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학습자의 삶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오히려 불안한 사회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학습하지 않는 불안함'만 더할 뿐이다.

VI.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전개에 있어서 계약학과 제도의 기대역할에 대한 고민이다. 특히 한국사회 양산되어 있는 학령기 중심 대학자원을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고등교육체제로 전환하려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대학기만 산업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제도인 '계약학과'와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환경적 요소와 계약학과라는 제도적 요소의 전략적 조합은 이 연구가 주목하는 바이며, 이 두 조합의 기대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전개 양상과 계약학과 제도와 유관 제도들을 분석하였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전개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사업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사례대학 4곳(국립대학 1곳, 사립대학 2곳, 전문대학 1곳)에 대해 왜 이 사업에 참여했는지,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사업의 전개상 특징이 무엇인지, 어떠한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례대학들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대학들은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환경과 대학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다양한 동기와 운영전략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사례에 있어서 차이가 확인하였으며, 국립대학의 경우, 지역 내 인지도를 통해 2030세대 뿐 아니라 4050세대의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었다. 일반 사립대학 사례의 경우, 학습자의 교육비에 재정적으로 많은 부분 의지하는 구조 상 학령기 대학입학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성인학습자 유치 및 지역사회 평생학습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전문대학사례의 경우, 대학입학자원 감소를 다른 유형의 대학들보다 더 일찍 체감한 만큼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산업체 구인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업체와의 연계를 중요시하고 교수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는 등 기업가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평생학습중심대학에 참여하는 대학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공통적인 특징들은 (1) 대학 본부를 중심으로 체제개편이 이루어진다는 점, (2) 성인학습자를 위한 유연한 체제개편 및 학습지원 제공된다는 점, (3) 지역 및 지역 산업체와 적극적인 연계체제 구축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개선해야 할 점들도 여럿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중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점은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지속가능성으로서 사업지원이라는 지지대를 제거하더라도 체제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특히, 체제개편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통로의 다양화와 운영의 책무성이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이제까지 노력이 일순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약학과 제도는 목적과 대상에 있어서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동일하지만 산업체 또는 지자체의 교육수요에 따른 대학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정부, 대학, 산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주체들 간의 재정분담과 책무성에 있어서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운영 규칙, 교육비용에 대한 면세제도나 우선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금 환급제도 등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대학기반 계속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성인고등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도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계약학과의 운영이 대학에 설치되어 대학의 학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 있어서 대학체제는 '생태계'가 될 수도 있고 '한계'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계약학과 제도가

각각 '환경'과 그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제도'라는 면에서 전략적 조합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계약학과 제도적 요소가 평생학습중심대학 직업능력개발 과정 운영에 있어서 재정분담과 법적 책무성 강화에 있어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본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대학 전체가 성인 친화적이고 탄력적인 학사체제를 추구하는 바,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서 일반 학령기 중심 대학과 차별화된 생태계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평생학습중심대학과 계약학과의 전략적 조합이 충분한 시간 동안 다양한 계약 당사자들에 의해 재생산될 경우, 평생학습중심대학 제도화에 있어서도 관련 제도들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평생학습중심대학이나 계약학과의 협력을 통한 성인학습자의 대학기반 평생학습 및 계속교육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에만 집중하게 될 경우, 성인학습자의 학력인플레만 부추길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고등교육 보편화 세대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성인학습자들이 요구하는 고등계속교육에 대한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중심대학과 계약학과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지속적으로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체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상보적 관계 안에서 교육내용 질적 개선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평생학습 부문뿐 아니라 고등교육, 산업교육 부문의 협력 요구한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취업지원과](2013). 계약학과 설치 운영 Q&A.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기본계획(안).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기본계획(안).
- 교육과학기술부(2013). 계약학과 운영요령(2013년 5월 22일 개정).
-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2013). 2013년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 기본 계획(안).
-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2013). 2013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 기본계획 (안).
-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2014). 2014년 선취업 후진학 관련 평생교육 사업 기 본계획.
- 교육인적자원부(2001).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
- 교육인적자원부(2002). 평생교육백서, 제6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08). 2008 평생교육백서, 제11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09). 2009 평생교육백서, 제12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0). 2010 평생교육백서, 제13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0). 2011·2012 평생교육백서, 제14·15호 합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a). 2013 평생교육백서, 제16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b). 2013년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우 수사례집.
- 남궁근(2004).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 권두승·조아미(1999). 성인학습 및 상담.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화(1993). 한국의 교육불평등(고등교육 팽창의 과정과 결과). 교육과학사.
- 김종서·김신일·한승희·강대중(2009). <개정판>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 김진모·최동선(2010). 선취업 후진학 정착을 위한 재직자 특별전형 활성화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서울대학교.
- 김진모·최동선(2011). 학업, 취업 병행 여건 개선 방안 연구. 교육과학 기술 부, 서울대학교.
- 박준경(2001). 산학연정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 구과제 보고서.
- 박진영 (2010). 성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및 대학생활 적응 연구. 평생교육학

- 연구, 16(4), 1-29.
- 박진영(2007). 지방대학 전업주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 지역사회연구 15(1). 한국지역사회학회, 95-124.
- 박환보·양희중·김기석(2009). 고등교육 보편화의 두 사례. 한국과 캘리포니아 주 고등교육체제 비교. 비교교육연구, 19(1). 1-23.
- 서정화 외(2006). 평생학습사회에서의 대학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손준중·구혜정(2007). '비전통적 학습자'의 고등교육기회 분석: 대학입학전형제도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3(2). 한국평생교육학회, 141-163.
- 신현석(2005).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학지사.
- 윤여각(2009). 대학의 평생학습역할 제고를 위한 대학 재구조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양재면(1994). 공업기술교육과 산업체의 요구. 교육월보(6).
- 이석우(1998). 대학의 역사. 서울:한길사.
- 이정희·안영식 (2007). 만학도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3(3), 89-116.
- 임도빈(2009). 질적연구방법의 내용과 적용전략: 양적인 질적 연구와 질적인 질적연구. 정부학연구, 15(1), 155-187.
- 천세영·한승희(2006).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고등교육의 의미와 대학의 위상 전환. 평생교육학연구, 12(1), 127-144.
- 최동선(2012). 고졸자 후진학 계속교육 지원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상덕 외(2007).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체제 혁신 방안 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외(2009). 대학평생학습의 모형개발 및 지원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2008).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영국 대학 개혁 정책의 역사적 고찰. 평생교육학연구, 14(3), 51-75.
- 최동선 외(2013). 중소기업 계약학과 발전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지희(2009). 산업계가 요구하는 대학평생학습 모형. 대학평생학습 모형개발 전문가 포럼. 한국교육개발원.
- 최홍선(2011). 평생학습 중심대학의 성과 분석을 통한 대학의 평생학습체제 전환 방안. 광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승희(2003). 교육정상화와 개방형 평생교육체제 구축. 평생학습-지식강국으

- 로서의 첫걸음. 한국교육개발원.
- 한승희(2005a). 평생교육론(2판). 서울: 학지사.
- 한승희(2005b). 포스트모던 시대의 평생교육학. 서울: 집문당.
- 한승희(2006). 평생학습사회의 학습체제 연구를 위한 생태체제적 개념모형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2(4), 179-202.
- 한승희(2010). 평생학습사회연구. 교육과학사.
- 크리스토프 샬, 자크 베르제르(김정인 역, 1999). 대학의 역사. 서울: 한길사.
- 평생교육진흥원(2010). 2010년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실행계획(안).
- 평생직업교육국(2010). 2010년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안).
- 평생직업교육국(2011). 2011년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안).
- 한국교육개발원(2009a). 대학평생학습 모형개발 전문가 포럼.
- 한국교육개발원(2009b). 대학평생학습의 모형개발 및 지원전략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년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년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Donaldson, J. F., & Graham, S. (1999). A model of college outcomes for adults. *Adult Education Quarterly*, 50(1), 24-40.
- EULLearN (2006). *European University Lifelong Learning: The Managers' Handbook*.
- Gornitzka, Å. (1999). "Governmental policies and organisational change i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Vol. 38, pp. 5-31
- Field, J. & Schuller, T. (1999). Investigating the learning society. *Studies in the Education of Adults*, 31(1), 1-9.
- Elken, Mari (2008). *Lifelong Learning - a Core Activity for Universities?*. University of Oslo.
- Mark, Moore and Valk (2004). *ALPINE(Adults Learning and Participating in Education) Project's Manual*.
- Mark, R. (2006). *Increasing Adult Participation in Higher Education*. R.

- Mark et al. (eds) *Adults in Higher Education: Learning from Experience in the New Europe*. 2nd edn. Bern: Perer Lang.
- Mason, J. 김두섭 역(2004).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 Meyer, J. W. (1994). "Rationalized Environments", in Scott, W. R. & Meyer, J.W. (eds.), *Institutional Environments and Organizations: Structural complexity and Individualism*,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9-27.
- NCIHE (1997). *Higher Education in the Learning Society*. National Committee of Inquiry into Higher Education.
- Osborne, M. (2003). *A European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and Practice in Widening Participation to Lifelong Learning*.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 Pfeffer, J. (1982).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 Schuetz, H. G. (2006). "International concepts and agendas of lifelong learning." *Compare*, 36(3), 289-306.
- Schuetze & Slowey(eds) (2000).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learner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hange*. London: Routledge.
- Trow, M. (2006). Reflections on the transition from elite to mass to universal access. In Schuetze & Slowey(eds.)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learner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hange*. London: Routledge.

부 록

[부록 1] 2013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현황

학위	지 역	주 관 대 학	학 과
석 사	서울	한성대학교	융합기술학
		송실대학교	IT융합
	부산울산	부산대학교	기계부품시스템학
	대구경북	경일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
	광주전남	전남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
	경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전자제어공학
		단국대학교	글로벌 e-SCM
	대전충남	충남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
		공주대학교	반도체기계공학
	강 원	상지대학교	응용전자공학
충 북	충북대학교	나노반도체공학	
전 북	전주대학교	탄소나노부품소재공학	
경 남	경상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	
학 사	부산울산	동아대학교	산업공학
		부경대학교	기계IT융합시스템
	대구경북	대구대학교	IT융합
	광주전남	남부대학교	의료공학
		목포대학교	기계해양시스템공학
	대전충남	공주대학교	반도체기계공학
		순천향대학교	융합기계
		한밭대학교	생산경영공학과
		대전대학교	IT소프트웨어공학과
	경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메카트로닉스시스템공학
	강 원	관동대학교	에너지플랜트
		한라대학교	의료IT융합
		경동대학교	해양융복합학과
	충 북	한국교통대학교	IT융합응용
중원대학교		융합기계.전기전자부품공학	
전 북	전주대학교	탄소융합공학	
경 남	한국국제대학교	그린수송시스템	
전 문 학	부산울산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융합기계
		울산과학대학교	환경화학공업과
	대구경북	영남이공대학교	로봇메카트로닉스

사	광주전남	조선이공대학교	하이테크 CAD/CAM
		순천제일대학교	전기자동화
	경 기	두원공과대학	융합비즈니스솔루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나노융합
	인 천	인천재능대학교	표면처리
	강 원	상지영서대학교	의료IT융합
		한림성심대학교	지식산업서비스
	충 북	충청대학교	ICT융합
	전 북	전주비전대학교	그린수송기계시스템
	경 남	마산대학교	전기신재생에너지
동원과학기술대 (구.양산대학교)		IT융합기계	
44개 학교 : 석사 13개, 학사 17개, 전문학사 14개			

[부록 2] 2008-2013 평생학습중심대학 선정 대학 및 예산

연도	구분	대학 수	선정대학	예산(원)
2008	통합	8	서울·경기(명지전문대), 인천·충청(백석문화대, 백석대(컨소시엄), 순천향대), 대구·경북·강원(대구대), 호남·제주(광주대, 서강정보대), 부산·울산·경남(부산정보대)	7억
2009	1차	11	상(광주대, 순천향대, 한림성심대), 중(명지전문대, 목포대, 부산정보대, 서강정보대, 아주대), 하(건양대, 대구대, 진주산업대)	28.08억
	2차	30	서울·경기·인천(강남대, 고려대, 동아방송예술대, 명지대, 서울대, 수원여대, 안양대, 장안대, 한양대), 충북·대전·충남·강원 (공주대,	

			관동대, 백석대·백석문화대(컨소시엄), 주성대, 충청대, 한국기술 교육대), 전북·광주·전남·제주 (광주보건대, 군장대, 동신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제주한라대, 호남대), 대구·경북·부산· 울산·경남(경남도립거창대, 경남정보대, 금오공대, 대경대, 동아대, 마산대, 영산대, 포항대)	
2010	대학전체체제개 편형	10	공주대, 광주대, 명지전문대, 목포대, 부산정보대, 서강정보대, 순천향대, 제주한라대, 진주산업대, 한림성심대	25억
	평생교육원체제 개편형	9	경남도립거창대, 고려대, 나사렛 대, 대전대, 동신대, 동아방송예술 대, 아주대, 전북대, 충청대	
2011	평생학습선도대 학	4	공주대, 광주대, 명지전문대, 한림성심대	38.4억
	평생학습중심대 학 (대학전체체제 개편형)	12	경기과학기술대, 경남과학기술대 , 김천과학대, 대구대, 목포대, 백석 대, 백석문화대, 서강정보대, 서울 예술대, 순천향대, 영남이공대, 영 산대, 제주한라대	
	평생학습중심대 학 (평생교육원체 제개편형)	8	경남도립거창대, 고려대, 대전대, 동신대, 동아방송예술대, 마산대, 아주대, 전북대	
2012	2030 세대 선취업후진학	6	강남대, 경기과학기술대, 공주대, 명지전문대학, 영남이공대, 전남과학대	53.8억
	4050세대	14	경남과학기술대, 광주대,	

	재도약		김천과학대, 대구대, 마산대, 백석대, 서영대, 순천향대, 안양대, 영산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림성심대	
	평생교육원 체제개편형	5	경남도립거창대, 대전대, 동신대, 아주대, 전북대	
2013	학위과정(계속)	15	영산대, 공주대, 제주관광대, 영남이공대, 마산대, 전남과학대, 명지전문대, 한림성심대, 광주대, 강남대, 경기과학기술대, 김천과학대, 백석·백석문화대, 한국산업기술대, 대구대	265억
	학위과정(신규)	22	국제대, 제주한라대, 동양대, 총신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한경대, 구미대, 서원대, 수성대, 남서울대, 상명대, 순천제일대, 대진대, 강원대, 대구공업대, 경남과학기술대, 한신대, 신흥대, 강동대, 가톨릭상지대, 대구예술대	
	비학위과정	13	경상대, 동명대, 강원대, 동국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북대, 충북대, 한국복지대, 우석대, 창원대, 서울여자대, 건양대, 대구한의대	

Abstract

A Study of the Roles of the Contract-based Department System in Lifelong-Learning-Centered University Project

Han, Jihye
Lifelong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roles of the Contract-based department system in the Lifelong-Learning-Centered University project in Korea by analyzing four University cases and the structure of the Contract-based department system.

Lifelong-Learning-Centered University project started from 2008 to restructure universities for adult learners' continuing education and meeting the needs of the community and the corporations. Many universities have been participated in the project since 2008 to prepare for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students due to the low birthrate and the increase of the needs for adult learners.

For the Lifelong-Learning-Centered University is not yet been institutionalized, there is a need of 'institutional elements' for the sustainable reform process. In this study, Contract-based department system based on various co-working institutions could do some roles in the Lifelong-Learning-Centered University as an 'adult-friendly

environment.'

By analyzing the related institutions of the Contract-based department system, this research concluded that the system can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Lifelong-Learning centered University by providing institutional elements such as (1) shared financial aid system by various sources(government and corporations) and (2) intensified universities' responsibility for quality management based on legal liability.

In addition, for Contract-based department system the support system of the universities is crucial for effective course management. In this context, for Lifelong-Learning Centered universities,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s for adult learners are provided by the center of the universities, Contract-based department system can get better environment to support adult working learners than in the normal universities.

Most of all, even though the two actions' strategic union could be an effective way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the adult learners to the higher education system, if there is no concrete quality assurance system this union might be resulted in another academic inflation in adult education area.

Keywords : Lifelong Learning Centered University, Contract-based department system, continuing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dult learners

Student Number : 2012-21350